

**제13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등 참석 결과**

2022. 12.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 제 교 류 담 당 관 실

I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3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제11차 국제협력 정부간 전문가회의
- **일시·장소** : '22. 11. 7.(월) - 11.(금),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대면 및 화상회의 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등
 - ※ **우리측** : 법무부 국제형사과 윤기선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승은 주무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검주빈국제기구(표) 신도욱 법무협력관 대면참석

□ 회의 일정

| 일자 | 시간 | 회의 | 내용 |
|-----------|---------------|---|----------------------------|
| 11.7.(월) | 10:00 ~ 13:00 | 제13차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및 제11차 국제협력 전문가회의 병행 개최) | ○ 개회 및 의제채택 |
| | 15:00 ~ 18:00 | | ○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수행 |
| 11.8.(화) | 10:00 ~ 13:00 | | ○ 재정 및 예산, 기타사항 |
| | 15:00 ~ 18:00 | | ○ UNCAC 이행현황 논의 |
| 11.9.(수) | 10:00 ~ 13:00 | | ○ 협약 이행에서 얻은 정보, 사례, 경험 공유 |
| | 15:00 ~ 18:00 | | ○ UNCAC 이행현황 논의 |
| 11.10.(목) | 10:00 ~ 13:00 | | ○ 주제별 토론 |
| | 15:00 ~ 18:00 | | ○ UNCAC 이행현황 논의(계속) |
| 11.11.(금) | 10:00 ~ 13:00 | | ○ 주제별 토론(계속) |
| | 15:00 ~ 18:00 | | ○ UNCAC 이행현황 논의(계속) |
| 11.11.(금) | 10:00 ~ 13:00 | ○ 주제별 토론(계속) | |
| | 15:00 ~ 18:00 | ○ 기술지원 | |
| 11.11.(금) | 10:00 ~ 13:00 | ○ 기술지원(계속) | |
| | 15:00 ~ 18:00 | ○ UN반부패협약 특별총회 후속조치 논의 | |
| 11.11.(금) | 10:00 ~ 13:00 | ○ 보고서 채택 | |
| | 15:00 ~ 18:00 | | |

II. 주요 결과

1. 이번 회의는 제13차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및 제11차 국제협력 정부간 전문가회의의 병행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방식(대면회의, 화상회의 병행)으로 진행되었음.

2. 주요결과

- 이행점검, 자산회복,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발표
 - 우리 대표단은 태국과 공동으로 제출한 “동남아시아 법집행 전문가를 위한 지역 반부패 회의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소개
- 사무국은 2주기 이행점검 관련, 방문실사를 완료한 국가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2주기 이후 다음 단계 마련을 위해 올해 연말 당사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예산 상황 관련, 사무국은 현재 정규 예산과 이행점검그룹 회원국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2월 이후 회원국들의 신규 자발적 기여금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수반 활동이 축소되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2022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함.
- 카타르는 2025년 제11차 UNCAC 당사국총회 개최의사를 밝힘.
-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관련 아래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있었음.
 -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회복 시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예방 및 척결,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특정과 자산회복 강화 방안, △국제적 자산회복을 위한 정보수집과 장애요인, △자산회복과 국제협력에 있어 기술지원

Ⅲ.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 관련 지난 10월 방문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요약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작성 작업 중인바, 2주기 이행점검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우리 대표단은 금번 회의 기간 중 사무국측과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이행점검 진행 일정을 협의

< UN 반부패협약 개요 >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
-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년부터 아이티와 사모아가 한국 수검(2주기)중이며, 한국-파푸아뉴기니가 일본 점검(2주기) 예정

IV. 회의 세부내용

1.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수행

- 사무국은 지난 6월과 비교하여 방문실사를 마친 국가가 20개국 증가하였으며, 43건의 국가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보고함. 2주기 이후 다음 단계 마련을 위해 당사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예정이며, 2023.6월에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힘.
- 많은 당사국들이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국가의 반부패 법률 및 제도 마련과 부패예방에 기여하고 우수사례와 도전요인 및 기술지원 필요분야를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지를 표명함.
- 2주기 이후 다음 단계 논의에서 다수 국가들이 현재 체계를 유지·강화하되, 비국가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중 또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체크리스트 및 국가보고서 간소화 필요성, 칠레는 체크리스트 자료 상시 제출, 연락관, 국가전문가 교육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제안함.

2.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이행현황

- 사무국은 StAR Initiative를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관련 당사국의 자발적 정보제공에 따라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유하였다고 하면서 자산회복 가이드라인 발간, 전문가 파견, 기관간 협력 등 우수사례와 도전요인 등에 대해 소개함.
- 미국은 상호법률지원(MLA)에 있어 공식·비공식 채널을 활용한 시의적절한 정보공유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에콰도르는 네덜

란드, 캐나다와 함께 추진 중인 국제반부패법원 설립 논의에 대해 공유하는 등 당사국들은 자국의 자산회복과 국제협력 이행현황에 대해 발표함.

- 우리나라와 태국은 공동으로 제출한 “동남아시아 법집행 전문가를 위한 지역 반부패 회의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소개하며, 이 회의는 지난 8월 방콕에서 한국, 태국 및 UNODC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동 제안에는 반부패기관, 수사기관, 법집행 기관 등의 협력, 부패와 조직화된 범죄 연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담고 있다고 설명함.

3. (주제토론)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회복 시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 패널 : 이집트 행정관리당국 차관, 브라질 감사관실 사회보장·복지 과장, 미국 국무부 신규 상호법률지원팀 부이사관,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 선임연락관, 루마니아 법무부 국제법과 사법협력 법률자문관, 이탈리아 국가반부패기관 국제관계관, 세계은행 전략운영 수사과장, OECD 반부패 분석관

- 사무국은 동 주제 관련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분석 결과, 가장 흔한 부패 유형은 정부 당국과 공급자 간 조달에 있어 이해충돌이었으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지원요청과 대응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도적 역량강화, ▲기관간 협력, ▲국제협력 분야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함.
- (이집트) 2021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샤름엘셰이크 선언의 중요성과 비공식 및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한 당사국들의 GlobE 네트워크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이집트에서 시행중인 제도인 ▲코

로나 백신을 포함한 모든 공급품 대상 조달체계 일원화, ▲ 투명한 입찰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 포털 개발, ▲ 팬데믹 관련 민원 접수 대응 위한 매커니즘 제공 등에 대해 설명함.

- (브라질) 기존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부정행위와 금융 지원의 수혜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발표함. 도전요인으로는 기밀정보 안전성 확보, 정보의 정기적 업데이트, 높은 수준의 기관간 협조 필요성 등이 있으며, 기관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이고 적시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미국) 기술발전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사법공조에 있어 종이문서 기반 작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해 소개함. MLA 관련 전담 메일함을 지정, 협력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강화, 전자적 증거의 진위 증명 등 기술 접목을 통해 MLA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호주) 29개 정부, 법집행기관 및 민간부문 조직이 모여 법집행 수사 지원, 금융 부문 복원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Fintel Alliance를 소개하며, 부패 대응에 있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 행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루마니아) MLA 도전요인에는 정부 담당자 부재, 문서 전송 장애, 공공조달 부패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 이해 필요성 등이 있으며, 우수 사례로는 전자적 도구 활용을 통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구축, GlobE 네트워크와 같은 비공식 소통 채널 강화 등이 있음. 또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국과 사법부간 업무 디지털화, 서류 접수 유연성 확보, 정기적 양자회의 개최를 통한 사법부와 법집행 당국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안함.
- (이탈리아) 팬데믹 이후 이탈리아에서 이행중인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입법적, 제도적 조치에 대해 소개하며, 정보시스템 간 상

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국내외적 제도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자국의 국가반부패기관이 부패위험 지표 이해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함.

- (세계은행) 팬데믹 대응을 위해 15개월간 총 1,60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패스트트랙을 통해 77개 국가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함. 또한 2020.9월 ‘부패척결을 통한 정부효율성 향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면서 공공조달, 공공인프라, 국영기업, 관세행정 등 분야에서의 부패 추세를 분석하였다고 소개함.
- (OECD) 2020.9월 OECD 반부패국이 개시한 ‘세계 법집행기관의 위기상황에서의 부패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함. 이는 지역적 법집행기관간 웨비나 등을 통한 사례연구에서 얻은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 업데이트 중이라고 설명함.

4. (주제토론2) 자산회복 관련 ‘실소유자 투명성’

※ 패널 : 오스트리아 실소유주등록기관장, 가나 호적등기소 주 검사장, 우루과이 금융정보분석원장, 나이지리아 국가평가기준금융정보원장

- 사무국은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에 있어 실소유주 등록이 미치는 영향과 우수사례, 당사국의 실소유주 관리 실태 및 정보 접근성 분석 등에 대해 소개함.
- (오스트리아) 2018년에 도입된 자국의 실소유주 등록체계에 대해 소개한바, 기업은 매년 실소유주 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위반 시 자동적인 벌칙이 부과된다고 언급함.
- 국내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실소유주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신용기관 통한 정보 정확성 확보, 신탁계약 투명성 확보 등 다
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소유주 정보 관리

○ (가나) 실소유주 정책을 2016년 처음 도입하였고, 2019년 개정된
기업법을 통해 실소유주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소개함.

- 2020년에는 세계은행의 등 지원 하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소
유주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FIU 및 대중은 이를 통해 정
보 접근이 가능함.

- 특히 실소유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
함을 강조하며, FAQ와 매뉴얼 제작,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대
중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

○ (우루과이) 2012년 무기명 주식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17년에
는 실소유주 등기소를 설립, 2018년부터는 세금 정보가 관계 당
국과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등 실소유주 관련 제도를 강화
해 오고 있다고 설명함.

○ (나이지리아) 2019년 채굴산업 분야에서 처음 실소유주 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 무기명 주식 발행 금지, 실소유주 정보 절차 자동화, 정보 활용 기관
간 협력, 위험 기반 감독을 우수사례로 꼽았으며, 타국과의 사법
공조 시 실소유주 정보 제공 지연 등이 극복 과제라고 설명함.

5. (주제토론3) 국제적 자산회복에 있어 정보수집과 우수사례 및 교훈

※ 패널 : 영국 내무부 국제운영자산회복정책장, 미국 법무부 자금세탁·자산회복
분야 선임공판변호사, UNODC 불법자금흐름과자산회복 정보 통계측정 담당자

- 사무국은 자산회복 관련 수집된 정보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주요 사항으로는 국제적 자산회복 노력 지속 확대, 부패 수익 종착지의 다양화, 민사몰수제도의 중요성 증대, 범죄수익 유출 대상 국가의 사전 예방 노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영국) 자산회수 절차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수립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하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수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범죄수익에 관한 자산 동결, 몰수 등 관련 수치를 통계화하여 발간하고, 타국과 MOU 체결, 시민사회 참여 등을 통한 자산회복 협력 사례를 소개함.
- (미국) 범죄수익환수 과정은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StAR Initiative에서 연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국가들의 자산회복 노력이 매우 증대되었음을 언급함.
 - 정보수집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관찰당국에 자산 회복 절차는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자산회복 관련 법원기록과 추적 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한 정보수집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UNODC) 불법자금 흐름과 자산회복 데이터의 통계측정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특히 불법자금흐름 측정 도구 개발에 있어 UN무역개발회의(UNCTD)와의 협업에 대해 소개함.

6. (주제토론 4) 자산회복 관련 기술지원

※ 패널 :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관 정책과장, Open Ownership 전무, IACCC Acting host, 세계은행 부패예방 및 형사사법 담당관

- 사무국은 협약 제5장인 자산회복 이행에 있어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실소유자 관련 기술지원이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
- (노르웨이)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관이 공공기관의 역량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세계지식은행에 대해 소개함. 이에 더해 UNODC, StAR Initiative, UNDP, ICAR, UNCAC 시민사회연합 등 기관도 기술지원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Open Ownership) 반부패 노력에 있어 정부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최근 20여개 국가에서 실소유주 관련 법적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함.
- (세계은행) 당사국 요청에 의해 작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18건의 기술지원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자산회복을 위한 입법 지원, 국제·국내적 조화 메커니즘을 위한 지원 등이 있었다고 설명함.
- (IACCC 패널) 법집행기관간 국제협력 촉진, 정보공유, 대형부패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자산회복 지원 등 IACCC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자산회복을 위한 기소를 지원함으로써 대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국가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7. (주제토론 5) 국제협력 관련 기술지원

※ 패널 : OCP 라틴아메리카 팀장, UNDP Oslo Governance Center 국제프로그램 자문관, UNSOM 거주자 및 인도주의 조정자

- 사무국은 협약 제4장 국제협력 이행에 있어 기술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있어 부패 조기 대응 및 이 경험을 통한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함.
- (OCP) 공공조달에 있어 팬데믹의 영향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직면한 부패척결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 소개함. 공공 분야는 공조의 어려움, 기업은 조달 기회 제한, 시민사회는 정보 접근 제한 등이 도전 과제라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정책 수립 및 정보공개, 협력 및 감독 강화,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UNDP)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평화복원 등을 통해 얻은 경험에 대해 소개함. 팬데믹은 보건 문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버넌스 기관과 체계 문제까지 확대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UNODC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있어 반부패 측정 통합도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함.
- (UNSOM) UN의 소말리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소말리아 내 부패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8. UNGASS 후속조치

- 사무국은 UNGASS 정치선언문 이행에 있어 업데이트된 사항을 공유한바, 지난 당사국총회 회기간 회의에 170명의 국제기구/비정부기구 참석자를 포함하여 총 730명이 참석하였으며,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지속 분석·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과 러시아는 다음 회의 의제로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법적 제도와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